신임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

이성희 용마엔지니어링 대표

"감리 본연의 목적은 부실 공사의 차단이지요"

1994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건설 감리는 건설산업의 한 분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IMF 외환 위기 이후 건설 감리산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우선 규제 완화 측면에서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한 책임 감리가 축소되었고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 측면에서 책임 감리와 CM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건설 감리 시장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확대시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감리산업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감리업계의 달라진 여건과 환경에 따른 변화가 가시화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2년, 한국건설감리협회는 지난달 27일 정기총회를 열어 이성희 용마엔지니어링 회장을 제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건설 감리 시장은 1997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다가 1999년부터 급격한 수주 감소를 보인 이후 최근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회장이 진단하는 감리업계의 현 상황이다.

이 회장이 분석하는 감리 시장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건설 시장의 침체. 아울러 대상 공사의 규모나 공종 변경 등 건설 감리 제도의 변화에 의한 신규 건설 감리 물량의 급격한 감소도 주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또 시장 축소에 따른 과당 경쟁으로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감리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감리비 낙찰률 상향 조정 등 적정 감리비의 지급 보장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지난해 감리 낙찰률은 60 70%에 불과합니다. 감리비는 현장에 투입되는 감리원의 인건비 위주로 구성되는데 90% 이하의 저가 낙찰로는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건교부, 재경부와의 협의 끝에 50억원 미만 공사는 낙찰률을 83% 이상으로 결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은 다소간 해소되었습니다만, 감리 대가 기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감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감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 정부 정책이나 세계화의 흐름이 정부 권한을 점차 민간에 이양해 나가는 추세이므로 이에 맞추어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하고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감리업계의 최근 핫 이슈는 바로 건설사업관리 업무와의 연계 문제. 사실 향후 건설 경기가 완전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감리 시장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건설 감리 시장이 건설 공사의 규모 또는 공종에 따라 제도적으로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이 회장은 감리 업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CM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감리 업무 및 CM 업무와 관련된 표준 서식집 마련, 절차서 및 핸드북 개선 등을 통해 감리 업무를 더욱 체계화시키고, CM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사항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현 감리 시장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관계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이 회장이 평소 생각하는 감리 본연의 목적은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감리업계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자정 방안을 마련,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부실 감리 업체 및 자격 미달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부실 감리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반드시 필요한 감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협회 차원에서 역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해외 진출입니다. 대형 업체는 기술 개발 및 축적에, 중소업체는 세부 전문 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감리 산업을 새로운 사업 관리 기법과 선진 감리 기법으로 향상시킨다면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CJ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